

그린 어바니즘, 유럽 지속가능도시의 경험과 메시지

이 시 철(경북대학교 행정학부)

1. 들어가며
2. 지속가능성과 그린 어바니즘
 - 1) 발전, 도시, 지속가능도시
 - 2) 유럽의 그린 어바니즘
 - 3) 그린 어바니즘에서 바이오필릭 시티로
3. 한국의 녹색성장, 현상과 이슈
4. 유럽도시 사례의 응용 가능성
5. 마무리

I. 들어가며

이 글은 그린 어바니즘(green urbanism)을 연결고리로 삼은 연구노트 겸 관련 책의 서평, 해제 성격을 함께 담아 정리한 것이다. 지속가능도시의 개념 또는 사조와도 긴밀히 이어지는 기본적 이념을 개관하는 가운데, 실제 유럽 도시의 사례를 영역별로 묶어 낸다. 우리나라에 직접 중단기로 적용할 만한 시책도 짚어보면서 특히 우리나라 녹색성장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년 넘게 강조되었던 녹색성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색깔이 지워지거나 흐려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그대로이다. 이전 정부의 기조와 색채를 바꾸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현 정부만의 고집은 아닌데, 노무현 정부의 분권과 혁신이라는 말은 2007년 말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각종 보고서와 공무원들의 머리에 서부터 이미 퇴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대신하여 선진화와 녹색성장이 자리 잡는데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국민행복과 창조경제가 이미 언론과 정부정책의 중심 화두로 자리 잡은 것은 예상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용어나 캐치 프레이즈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내포하는 속성 및 실제 파급효과일 터이다. 후술하겠지만, 녹색성장의 내용, 우선순위, 추진과정 및 체계 등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여 이를 그냥 통째로 버리고 말 것인가. 지구촌 전체의 자연스런, 동의된 흐름을 거부할 일인가. 또 그렇게 색깔을 지운다고 지워질 일인가.

오히려 꼭 필요하다면 간판의 색깔이나 디자인을 바꾸더라도 본질을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절차 및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더 진화시키는 것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또 현 집권층을 위해서도 훨씬 나은 일이 아닐까 싶다.

그린 어바니즘의 상세한 내용과 실제 유럽도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원하는 독자들은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번역대상 명저로도 선정된 Beatley(2000) 또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저서인 Lehmann(2011), Beatley & Newman(2008) 등 이 주제를 다루는 책이나 논문을 읽으면 된다. 그린 어바니즘이 중점으로 다루는 이념과 사례는 많은 경우 유럽 도시를 초점으로 두고 있다. 그린 어바니즘 저서들의 경우 순수한 학술 주장보다는 오히려 일상의 언어로 설득력 있게 뜻을 펼친다. 예로 Beatley(2000)에서 저자가 당초 목표로 한 독자층은 미국의 학자 및 시민들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큰 우산 아래 유럽의 경험을 그네들의 도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Lehmann(2011)의 경우, 64개 도시를 망라하며 다양한 어려움과 그린 어바니즘의 ‘기회’에 대하여 900쪽의 방대한 분량에 담아내고 있다.¹⁾ 이하에서 관련 주제와 저자를 간단히 소개하는 가운데, 한국의 맥락에서 도시정책의 주요 참여자와 시민을 위한 메시지를 읽어낸다.

II. 지속가능성과 그린 어바니즘

1. 발전, 도시, 지속가능도시

발전(development)을 사전적으로 정의할 경우 양적인 성장과는 달리 구조든 기능이든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Jacobs(2000: 33-34)가 19세기 진화론자들 또는 생태학자들의 생각을 빌어 표현한 바에 의하면 발전은 우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분화한 것이다(differentiation emerging from generality). 발전은 끊임없이 여러 차원에서 병렬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데 여러 분화가 묶이어 다시 일반성을 만든다. 그 일반성에서 새로운 분화가 일어나야 발전이 되는 것이다. 도시공간의 형성 및 발전 또한 비슷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를 정의하는 다양한 차원과 방법을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 한자어 ‘도시’(都市)의 기본적 어의는 임금 또는 최고 권력의 터(king's place), 저자 또는 상업활동의 중심(market place)으로서 즉 정치와 경제가 집중된 곳이다. 현대 도시계획의 의미로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밀도(density), 집적(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장소이다. 이렇게 제한된 의미 부여를 훌쩍 뛰어 넘어, 어떤 학자는 도시 안에 우주를 담을 수도 있을 것이라

1) Timothy Beatley는 미국 버지니아대 도시계획 석좌교수로, 학문과 현실세계를 넘나들며 연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친생명 도시 또는 ‘바이오필릭 시티’(Biophilic Cities)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시계획에 자연의 요소를 최대한 통합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세계를 무대로 바이오필릭시티 네트워크를 구체화 중이다. Steffen Lehmann은 영국 뉴캐슬 대학의 건축설계학과 교수로서 아태지역 지속가능개발협의체 UNESCO 의장직을 맡고 있다. 시드니와 베를린을 축으로 하는 저명한 건축연구소(s_Lab Space Laboratory for Architectural Research and Design)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할 만큼 유사 이래 인류의 예지와 역사가 축적된, 끊임없는 발전의 공간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땅, 환경, 자연자원 등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니 당연히 잘 보듬어 사용하다가 온전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리라.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삶의 터전이 그렇게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꾸려가는 비법을 해안과 경험으로 직접 실험하고 터득한 것 같다.

그런 어바니즘의 개념 또는 사조와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도 지속가능도시(sustainable cities)가 아닐까 여겨진다.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 sustainability)은 보통 환경이나 생태 측면에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인 시각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Our Common Future) 이후부터로 알려져 있다. 즉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본다(하성규 외, 2003; Wikipedia 참조). 도시 단위의 지속가능성은 보통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지구촌이 함께 공유하는 상황과 어울려 많은 관련 문헌, 특히 비교적 최근인 Lehmann(2011) 같은 경우 그린 어바니즘의 가치 또는 원리(principles)를 더욱 명료하게 하는 경향이다. 에너지 효율(energy-efficient), 제로탄소배출(zero-carbon),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등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처럼 그린 어바니즘의 비전은 이제는 학계와 시민의 일상에서도 익숙해진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등 이슈와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다.

2. 유럽의 그린 어바니즘

그린 어바니즘 관련 저작들의 공간적 초점이 주로 유럽의 도시라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높은 가운데 환경적 자각이 세계 어느 권역보다도 일찍 이루어졌던 곳이 유럽 아니던가.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 북유럽 국가가 특히 그러한데, 기후변화, 환경보전, 탄소배출 등 거의 모든 크고 작은 생태이슈에서 실질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볼 수 있다.²⁾ [표 1]에 나타난 대표적인 그린 어바니즘 도시 다수가 북유럽쪽임을 보라. 아울러 국민국가 단위가 아니라 개별 도시라는 것은 중세 자치도시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아시아 각국에 견주어 쉽사리 이해가 될 일이다.

유럽에서 ‘그린’이 화두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와 함께 학계 뿐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도 마찬

2) 가장 최근의 관련 이슈로 2013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역내 운항 항공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들 수 있다. 유럽 항공사들은 이러한 규제에 익숙한 반면 그렇지 않은 중국, 인도 등 10개의 외국 항공사들이 배출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3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3. 5. 17).

가지여서, 특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변화,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중심 주제가 되었으며, 뉴욕타임스의 저명 컬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은 이를 코드 그린(Code Green)이라 이름 붙인 바 있다(Friedman, 2008).

Beatley(2000)에서 대표되는 유럽도시의 그린 어바니즘에서 ‘그린’은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과시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어느 도시공간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이용으로, 그의 책에서도 도시토지의 압축 개발을 강조하며 시작한다. 함께 사는 공간에 세워지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주택형태의 이야기가 나타난 후, 대중교통으로 인한 효율성과 형평성, 또 승용차를 덜 타게 됨으로써 얻는 경제 및 건강의 이익까지 덩으로 챙기고자 한다. 이어지는 도시환경 및 생태는 그린의 걸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분야이다. 아울러 도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생동감을 강조하며 폐쇄순환형의 균형 사이클을 부활시키려 한다. 도시의 동력을 태양에 기대어 얻고 여타 재생에너지로 보강하고자 한다. 생태 거버넌스와 함께, 산업공생(industrial symbiosis) 등 지속가능 경제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로 넓디넓은 지속가능성의 세계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셈이다.

표 1. 유럽 그린 어바니즘의 모범도시 사례

<u>오스트리아</u>	<u>스위스</u>
그라츠 Graz*	취리히 Zurich
린츠 Linz	
비엔나 Vienna	<u>스웨덴</u>
	스톡홀름 Stockholm
<u>덴마크</u>	
앨버츨룬트 Albertslund*	<u>네덜란드</u>
코펜하겐 Copenhagen	알메어 Almere
에르닝 Herning	아메르스푸르트 Amersfoort
칼룬드보르그 Kalundborg	암스테르담 Amsterdam
콜딩 Kolding	덴 하흐(헤이그) Den Haag
오덴세 Odense	호로닝언 Groningen
	라이덴 Leiden
<u>독일</u>	위트레흐트 Utrecht
베를린 Berlin	즈볼레 Zwolle
프라이부르크 Freiburg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	<u>핀란드</u>
뮌스터 Münster	헬싱키 Helsinki
자브뤼켄 Saarbrücken	라티 Lahti

* 별표는 『유럽지속가능도시상』(European Sustainable City Award) 수상 도시임(Beatley, 2000).

‘그린 어바니즘’을 녹색 도시주의 또는 녹색 도시계획으로 쉽게 옮기는 것은 뭔가 너무 쉬우면서도 무리해 보인다. 우리가 아는 의미의 녹색이나 도시계획으로 한정 짓기에는 그릇의 폭, 깊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 제목을 얘기할 때도 그냥 「그린 어바니즘」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많은 유럽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린 어바니즘의 비전 또는 주요 요소로 Beatley(2000: 5-8)는 아래 몇 가지를 들고 있다.

1. 생태적 한계 안에서 살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근본적으로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s)을 줄이고 다른 도시 및 지역사회 그리고 전 지구 차원의 연결성과 영향을 인식하는 도시
2. 녹색으로, 자연과 비슷하게 설계되고 기능하는 도시
3. 선형(linear)이 아닌 순환형 신진대사(circular metabolism)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어느 차원이든) 배후지역(hinterland)과 도시의 상호 공생관계를 발전시키는 곳
4. 지역과 광역권의 자족성(self-sufficiency)을 추구하며, 역내 식량·경제·에너지 생산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주민을 돕고 지지하는 여러 활동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촉진하는 도시
5.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의 정착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도시

위 비전은 비슷한 개념으로 널리 알려진 지속가능도시, 스마트 성장도시 등의 영역과 겹치기도 하지만, 순환형 신진대사나 역내 식량·에너지 등의 자족,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 등에서 유럽의 공동체 특유 요소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선언적인 비전이긴 하지만 위 조건을 다 만족하는 도시는 아마도 없거나 희귀할 것이다. 다만, 그런 어바니즘을 완성형 또는 정책의 결과물로 보는 대신 과정이나 도시의 비전으로 여긴다면 의미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 아울러 그 개념 자체가 계속 진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린 어바니즘에서 바이오필릭 시티로

그린 어바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의미있게 사용하면서 이 사조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팀 비틀리는 「그린 어바니즘」(2000)의 저자이며 버지니아대 도시환경계획학과 석좌교수(the Teresa Heinz Professor of Sustainable Communities)로서 오레곤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한 후, ‘생태발자국’을 줄이면서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연구에 집중해 왔다. 짧은 시간은 네덜란드 현지에 살면서 풍부한 사례를 보고 겪었고, 아울러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의 도시를 직접 다니며 수많은 학자와 실무자를 만났다. 비중이 조금 덜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도시도 일부 포함된다.

분야별로는 도시의 토지이용은 물론 주택, 교통, 환경, 도시생태, 재생 에너지, 그린 거버넌스 등을 포괄하면서 특정 분야의 이론이나 관행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게 구체적 경험을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그린’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일관된 논리를 견지한다.

많은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국학자들이 흔히 말하듯이 이제는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프레임, 용어, 정책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그 말은 미국의 지배적 위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³⁾ 이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결코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도시계획이나 정책이 미국형 접근방식에 너무 편안해 진 것

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미국 박사와 미국에서 일해 본 공무원이 많아서일까? 태평양 건너 그 너른 땅의 사례가 우리에게 항상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을 다들 잘 알면서도 그렇다. 이를테면 197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 '90년대 이후의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또한 그들의 토양에서 태동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뉴어바니즘과 스마트성장에 대하여는 각각 김홍순, 2006; 윤혜정, 2006 참조).

바로 이 대목에서 팀 비틀리는 예외적인 존재가 된다. 즉 자주 보는 미국인 또는 보통의 미국 학자와는 사뭇 다른 태도와 관점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이 유럽 등 세계로부터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라면 더더욱 지리적 조건이나 토양이 비슷한 유럽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나 유럽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열악한' 사회적·공간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북서부의 포틀랜드, 시애틀 같은 몇몇 도시, 또는 뉴욕, 보스턴 등 동부해안의 과밀도시권을 제외하고는 밀도, 집적성, 보행친화, 복합용도 등 현대 도시계획에서 초점이 되는 주요 개념이나 사조를 특별히 내세울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런 미국의 경향을 바꾸려 나름대로 저토록 애를 쓰는 모습이 일면 놀랍기까지 하다.

비틀리 교수는 학술논문 외에도 이 분야 저서를 15권 이상 냈는데, 그 중 「윤리적 토지이용」(Ethical Land Use, 1994)은 미국도시계획학회의 “도시계획 필독서 100권”(100 Essential Books in Planning)에 꼽힌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저서인 「바이오펠릭 시티: 자연과 도시계획·설계의 통합」(Biophilic Cities: Integrating Nature into Urban Design and Planning, 2010)은 미국 조경협회의 최우수 5대 발간물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다섯 권 중 4개의 타이틀에서 green, sustainable, ecology, global warming 등의 용어가 직접 사용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University of Virginia 홈페이지; Wikipedia 참조)

비틀리 교수의 대표저서인 「그린 어바니즘」은 470쪽이 넘는 분량인데, 아래와 같이 총 6부 1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대로 이는 대부분 유럽의 모범도시에 대한 사례와 평가이며 각 장의 말미에는 미국 도시를 위한 메시지를 따로 두고 있다. 2011년에 중국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 한국어는 현재 번역작업이 진행 중이다. 저자는 유럽에 이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린 어바니즘 및 지속가능도시에 대한 저서를 별도로 낸 바 있다.

3) 201. 10.17-19 대구에서 열린 제 23차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세계대회에서 컨퍼런스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국 학자, 실무자들의 대화에서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이 기구(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lanning and Human Settlements)는 UN 산하기구로서 1964년 창설되어 각국의 경제성장, 인구증가, 도시계획, 주택정책 등에 관해 교류하고 있다. 2012년의 주제는 “Green City for Human Betterment”였음.

Timothy Beatley 「Green Urbanism」의 주요 쟁지

- 제1장 도입
- 제2장 토지이용과 도시형태: 압축 도시계획
- 제3장 창조적인 주택과 거주 환경
- 제4장 대중교통 도시: 교통의 혁신과 우선순위
- 제5장 자동차 길들이기: 차없는 도시의 기약
- 제6장 자전거: 낮은 기술, 우수한 생태적 이동성
- 제7장 도시생태와 도시환경의 녹색화 전략
- 제8장 도시생태 사이클의 균형: 폐쇄 순환형 도시를 향하여
- 제9장 재생 에너지 도시: 태양이 주는 혜택으로 살기
- 제10장 생태적 건축: 자연을 품은 건축과 디자인
- 제11장 그린 어바니즘 도시의 생태 거버넌스
- 제12장 지속가능한 경제: 재생형 비즈니스 혁신
- 제13장 그린 어바니즘의 약속

그린 어바니즘, 그리고 뒤이은 학문적·실무적 노력 여기저기에서 자연의 요소를 도시에 구현하거나 화학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묻어난다. 예컨대 숲, 녹지는 물론 에너지, 건축 등 분야에서도 자연을 도시 모듬살이의 한가운데에서 버무리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도시의 비오톱(biotopes), 나무 세입자(tree tenants), 그린 루프(green roofs), 에코 브릿지(eco-bridge), 도시 신진대사(metabolism), 제로 에너지 건물(zero-energy building) 등은 수많은 개념과 사례 중 일부일 뿐이다. 미국 태생 캐나다인으로 작가이자 현대 도시계획가인 제인 제이콥스에 의하면 “인간은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자연 속에 존재한다”고 한다(Jacobs, 2000).⁴⁾ 인류의 경제활동 특히 모든 도시의 삶과 공간이 자연 질서 가운데 어우러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뜻으로, 그린 어바니즘이나 바이오필릭 시티 캠페인이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저자의 학문 활동과 실천적 시도가 앞으로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과정이라 볼 수도 있다.

이어지는 맥락으로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사조로서 이른바 ‘친생명 도시’ 또는 ‘바이오필릭 시티’ 개념이 있는데, 이는 일면 「그린 어바니즘」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비틀리 또한 이 주제와 관련, 별도의 홈페이지를 활력있게 관리하면서 학자, 실무자, 전세계 시민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www.biophiliccities.org).⁵⁾

4) Jane Jacobs(1916-2006)는 미국 태생 캐나다 여성으로 도시계획을 정규 대학 등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만, 미국은 물론 세계의 웅대한 도시계획학자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다. 특히 이 분야 저서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을 남겨 학계와 실무 양쪽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5) 2012년 필자와도 몇 차례 교신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바이오필릭 시티로 꿈을 만한 곳이 어딘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뒷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보다는, 실제로 어떤 곳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내세워야 할지 확신이 아직 서지 않아서 용산 민족공원 등 몇몇 사례만을 간단히 얘기해 준 적이 있다.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생명에 또는 친생명)라는 용어 자체는 오래전 Wilson(1993)에서 유래되었으며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류의 선천적인 정서적 관계”(the innate emotional affiliation of human beings to other living organisms)라 한다. 이러한 내재적 관계가 이어질 때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영국의 정신건강단체의 연구인 MIND(2007)에 의하면 쇼핑센터를 걸어갈 때 불과 17%의 사람들이 자궁심을 느끼는데 비해 숲속 자연을 걸을 때는 90%가 그렇다는 것이다. 바이오필릭 어바니즘과 그린 어바니즘의 접점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데, 도시에 그린 요소(greenness)나 생명 요소가 추가될 경우 시민의 건강에 직접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전국에 걸쳐 1만명 이상을 직접 조사한 경험연구(Vries et al., 2003)에 의하면,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할 경우 도시환경에 10%의 녹지가 더 있을 경우 이는 약 5년의 삶이 연장되는 효과라 한다.

‘바이오필릭 어바니즘’이라는 타이틀을 직접 사용한 Beatley(2009)의 경우, 이러한 변화의 폭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리라 주장하면서, 이를 전세계 도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하고 그 흐름을 확산시키려 한다. 도시계획이나 설계의 중심에 자연을 두는 가운데, 개별 건물 및 주택(biophilic buildings and homes), 바이오필릭 동네(neighborhoods), 바이오필릭 도시(cities)의 3개의 차원 즉 인간 모듬살이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며 다룬다. 이를 ‘지붕에서 지역으로’(rooftop to region)라 일컫기도 한다.

Ⅲ. 한국의 녹색성장, 현상과 이슈

앞서 언급대로 유럽형 그린 어바니즘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보통 지속가능발전은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이라는 세가지 차원을 포괄한다. 우리나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과의 유사성과 미묘한 차이를 언급하면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유사하긴 하나,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의 한계로 지적되는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보완한 것”이라 설명했다(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www.greengrowth.go.kr). 어떤 이상형(ideal type)을 넘어 구체적인 모습으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 여기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다른 측면으로는 더 폭넓은 비전과 가능성을 일부 접은 채 물질적·단기적인 ‘성장’을 더 강조하면서 녹색 또는 친환경의 옷을 입힌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2013년 새 정부 들어 거의 모든 제도와 정책의 표면에서 ‘녹색’의 색깔 자체가 흐려지거나 이름이 바뀌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으로써 단순히 이전 정권의 역점사업을 멀리하려는 속성이 당연히 있겠지만,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자체에 대한 비판도 최근 확대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여전히 유망한 정책인가, 처음부터 뭔가 어긋난 미스매치(mismatch)였는가?

지난 5년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물론 아직 이르겠지만, 그간의 학계 및 언론에 의한 예비적 평가를 모아보면 어느 정도의 흐릿한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한다. 우선 정책효과에 대한 개괄적인 예비평가에 있어서도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다. 추진체계, 참여자, 내용적 범위와 우선순위, 시간적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1. 아직 이른 정책효과 평가?

전임 정부 5년 남짓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하여는 정파적 판단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평가가 엇갈린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경제 등 다른 주요 국정과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상처입은 분야가 녹색성장이었고,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2012년 대선과정에서도 그 추세는 이어졌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정부교체 이전인 2013. 2. 마지막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당연히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의미있는 위상을 정립했다고 주장한다. 200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등 언론에서 사용하던 녹색성장 용어를 국가의 핵심기조로 채택한 것이 우리나라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이다(주간조선 2013. 4. 21; Economist. 2000. 1. 27).

법령 및 제도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녹색예산 GDP 대비 2% 투자 등을 들면서 제도적 기반이 많이 확보되었다. 특히 주된 관심영역인 녹색기술·산업 부문의 경우 연평균 26% 이상 늘고 있는 녹색 R&D 투자, 녹색제품 및 기술수출의 성장(2005년 세계 15위 → '10년 7위 → '15년 4위 전망, HSBC 은행)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국내외의 평가도 긍정적이라 주장하면서, 예컨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함으로써 '녹색 선도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자평한다. 녹색기술센터(GTC),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더하여 특히 2012. 10. 대형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에 유치하는 등 이른바 '그린 트라이앵글'의 희망섞인 그림이 드러난 것도 의미 있어 보인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심각성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성과로 보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 2013. 2. 4 보도자료).⁶⁾

반면 4대강 사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계속되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인 녹색성장 사업 또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최근 언론보도로 이슈화되었던 2013년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즉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성과 도출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효과만 하더라도 관련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03; 연합뉴스 2013. 3.

6) 2013. 1. 한국리서치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우리 국민의 94.6%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97.2%가 녹색성장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25; 한겨레 2013. 3. 26).⁷⁾

지난 5년 녹색성장 정책의 실제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시기적으로도 이르며 현재 진행형이다. 아울러 산업, 기술,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녹색성장 색깔 지우기?

최근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정부조직 체계에서 녹색성장의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는 움직임이다. 우선 대통령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함께) 폐지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였고 실질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심의기능을 다해 왔기 때문에 이는 실로 큰 변화이다. 위상이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사무국 기능을 맡았던 기획단도 폐지되면서 2013. 4월 현재 10여명의 공무원이 업무 정리, 청산, 이관 등 작업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성장 업무 자체는 총리실 경제조정실로 이관되었지만 그 실무조직은 아직 그림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우려로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확정하여 올해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로드맵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고 GCF 사무를 보던 기획단이 사라지면서 관련 지원업무도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주간조선 2013. 4. 21).

2013. 3. 정부조직 개편 때 국토교통부의 녹색미래담당관실은 미래전략담당관실로, 환경부의 녹색환경정책관·녹색기술경제과·녹색협력과는 그 이름 중 ‘녹색’이 모두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런 추세라면 대구시 녹색에너지과, 경북도 녹색환경과도 곧 비슷한 운명에 처해질 것 같다. 이런 명칭 변경이 무슨 신호인지 관료조직은 금방 알아차릴 것이며 그 영향은 적어도 5년 내내 국민과 국토에 반영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전임 집권자나 정권에 대한 ‘격하’는 동서고금에 전혀 새롭지 않다. 그러나 그리 나쁘지 않은 정책까지 포기해야 하는가. 분권, 혁신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5년 전 모습의 데자뷰인데, 2018년 초 비슷한 현상을 되풀이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정도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또 전반적인 추진체계나 과정의 오류는 지적하더라도, 본질상 결코 나쁜 정책이 아니라면...

3. 관련 이슈와 방향

집권 vs. 분권 우선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추진체계가 집권적이고 하향형이었다는 점은 그 태생부터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효율성과 통일성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2008년 광복절 대통령 연설에서 본격 시작되었다고 여겨

7) 위 3.25 연합뉴스 보도에 대하여 환경정책연구원은 이튿날 낸 해명자료에서 이 연구가 “그간의 정책에 대한 부족한 점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며, 성과와 함께 미흡한 점을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것... [일부 언론보도처럼] 녹색성장이 미흡, 낙제점이란 취지의 내용은 연구결과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보도자료, 2013. 3. 26).

지는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일부 의혹의 시선이 있었음에도 모처럼 괜찮은 중앙 정부의 작품이 나왔다는 초기 평가가 많았다. 순식간에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의 주요 정책이념이 되어 각종 국책사업에서도 이 브랜드가 강조되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중앙 및 지방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녹색성장 전담부서와 인력이 확충되기도 했다. 또 각종 녹색뉴딜 사업이 본격 점화되어 매년 GDP의 2% 이상을 녹색 분야에 투자하려는 의욕도 펼쳐졌다.

지방단위 계획이나 시책 또한 모자라기는커녕 국가계획에 의해 근거한 시도별 5개년계획이 예외없이 따로 수립되었으며 2010년 이후 총 2천여 개 세부과제가 추진되어 왔다(녹색성장위원회, 2012). 물론 지방정부부문의 자체 평가는 긍정적인데, 지방단위로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가 2013년 초 종합평가한 내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예컨대 충청남도 녹색성장위원회(2013)에 의하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4670만tCO₂(BAU기준) 중 1400만tCO₂(30%) 감축 목표를 정상 추진 중이며, 조림사업 2652ha, 숲가꾸기 사업 3만 7136ha, 도시숲 조성 등 40ha, 총 3만 9828ha를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을 대폭 확충했다고 하는 등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다(충청투데이 2013. 4. 16.).

반면 중앙, 정부, 서울 중심의 하향식 스타일로 인해 지방, 민간, 지역도시 차원의 자발적 동력은 어쩔 수 없이 미약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중앙 정권의 교체에 따른 동력이 상실되자 지역의 모멘텀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녹색성장의 경우만이 아닌데, 1991년 리우 정상회의 이후 정부 주도로 한때 전국적 붐이 일었던 ‘지방의제 21’ 등의 활동도 뭔가 뜸해졌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하겠다. 대통령과 중앙부처들이 녹색성장을 세계 한다 싶으면 또는 각종 제도적 압력에 의해 지방에서도 규정과 기구를 새로 만드는 등 표면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 매우 익숙하다. 최근 거의 저절로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흐름은 정책 자체의 집권성과 아울러 지역의 역량, 도시 마다의 자발성, 시민적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그런데 있어서도 분권 상향의 필요성이 재삼 강조되어야 할 때다.

녹색성장, 그릇의 크기 녹색성장이라는 그릇은 그 폭과 깊이가 매우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존 정부정책의 모든 것을 담으려는 것은 무리일 터이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거의 모든 부처, 대부분의 정책 및 사업에 ‘녹색성장’의 꼬리표를 달면서 영역을 넓히는 바람에 초점이 흐려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2103)도 지적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정기조로 된 것은 이해가 되는 반면국민들에게 설득력있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심이 잡힌 사업이 많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녹색성장이라는 구호에만 매달려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실제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3. 3. 25).

친기업 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직선적으로 처음부터 지향해 온 이명박 정부의 경우 ‘녹색’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가 주어진 것은 일면 당연한 것이며 일관된 흐름일 수 있다. 실질적 초점이 산업, 기술에 치중되었고 거의 모든 시책영역에서 경제

적 측면이 강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환경 분야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환경 정책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간판만 녹색성장으로 바꾼 것이 많다보니 모니터링, 실적평가, 환류체계 등이 왜곡될 여지가 많았던 것 아닌가 싶다. 따라서 환경영역 역시 모든 것을 담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몇 가지에 초점을 두어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매우 많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녹색의 구름 속에 보일 듯 말듯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서 구현되고 목격될 수 있는 시책이 함께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중앙 및 지방단위 종합계획 등에는 그린카드 등을 통해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녹색생활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평가는 역시 "참여와 사용실적이 부진해 성과가 불투명하[며]...캠페인 형태의 정책은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된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4. 녹색성장 3.0, 한국형 ‘그린 어바니즘’이 대안?

이 글에서 녹색성장 5년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모두 살피면서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일일이 논의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 만큼, 여기서는 지방 영역에서의 정책과정에 초점을 두어 유럽형 그린 어바니즘과 견주어 가능한 대안을 예비 탐색하는데 그쳤다.

유럽형 그린 어바니즘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리도 익숙한 미국식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대안적 사고가 존재하며 그것이 어디선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심각하긴 하지만 ‘유로피언 드림’(Ripkin, 2007)에서도 나타나듯이, 공동체 의식, 문화적 다양성, 삶의 질, 지속가능발전, 자연존중 등 유럽적 인식과 가치는 여전히 이 땅의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Beatley(2000)의 각 장마다 말미는 실상 ‘미국 도시에 대한 교훈’으로 원저에 표현되어 있지만, 내용상 우리나라 현실에도 어울리는 메시지로 손색이 없는 경우가 많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 후 꼭 20년이 지난 2012. 6. 같은 장소에서 속칭 “Rio+20”라 불린 UN지속가능회의가 열렸다. 이를 두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세 가지 중요한 초점을 강조하였는데, 첫째는 경제성장, 식량, 에너지, 자연자원에 대한 더 새로운 사고이다. 둘째, 사람들의 일상을 향상시키는 실제적 개선조치 등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 물, 공기, 숲 등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도시가 자연과 어울려 더 살기 좋도록 구체적 행동이 나오도록 요청하였다. 셋 모두가 그린 어바니즘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로서 앞서 상세히 언급된 것이다. 유럽 도시들은 그 셋 모두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도시 차원에서도 자발적으로 실천해 왔음을 본다. 대한민국, 또 이 땅의 도시들도 그리 할 수 있을까?

Ⅳ. 유럽도시 사례의 응용 가능성

그린 어바니즘 논의에서 제안되는 유럽의 수많은 아이디어와 시책사례가 그저 놀라울 뿐인데, 그 중 이 땅의 상황에 맞을, 또는 장단기로 교훈삼을 몇몇 특정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관하게 지난 10여년 이상 이미 여러 다양한 경로로 비슷한 정책이 수입, 실험, 창조된 만큼 상당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자리 잡았음을 우선 말해야 한다. 민족의 DNA 특성인지 체제의 능력인지 뭔가 좋은 것을 매우 빠르게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거듭 확인된다.

서구의 인문철학, 과학기술, 민주적 제도 등이 불과 반세기만에 이식된 것처럼, 친환경 또는 그린 어바니즘 등과 관련되어 제기된 아이디어 특히 물리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시책은 상당수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모방, 실험, 공식 시행되고 있다. 지역난방, 녹지기금, 그린루프 등 익숙한 내용부터, 솔라에너지, 공용자전거, 카셰어링 등 비교적 최근 사례까지 다양하지 않은가. 일단 Beatley(2000) 등 일부 문헌에만 한정하더라도 이미 실험된 아이디어와 연결, 이 땅에서 고려할만 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다.

1. 그린 마인드, 교육과 홍보

그린 어바니즘을 위한 물리적 시설이나 공식 제도 이전에, 시민과 공무원 등의 의식 변화와 이를 위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고 주의하며 가야 한다는 보행자로서의 소극적 주의를 교육받는 동안, 스웨덴의 경우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유형의 자동차를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운전할 것인가?”라는 능동적인 행태를 배운다는 사례(최희경, 2013)가 매우 대조적이다. 또 네덜란드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리기 직전 운전석 차문을 열 때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받음으로써 후방에서 자전거가 오는지 저절로 돌아보게 된다는 것도 한 사례일 뿐으로, 어린 시절 가정과 제도권의 교육이 모든 것의 근본일 터이다. 정부와 학교 뿐 아니라 기업부문이 지속가능성 교육에 나서는 모습도 특히 유의할 만하다. Beatley(2000) 제8장, 제12장에서 소개된 스웨덴의 ‘내추럴 스텝’(Natural Step)의 경우 정부는 물론 호텔 등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다.⁸⁾ 제11장 레스터의 ‘대세의 전환’(Turning the Tide) 캠페인을 보면 실제 기획단계부터 언론, 대학,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홍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⁹⁾

8) 스웨덴의 한 암연구자(Karl-Henrick Robert)가 창안한 내추럴 스텝은 지속가능성에 관심 있는 모든 회사와 단체가 존중할 이하 네 가지 시스템 조건을 강조한다. (1)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은 생태권에서 체계적으로 증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사회가 생산하는 물질이 생태권에서 체계적으로 증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생산력의 물리적 기초와 자연의 다양성이 체계적으로 감소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The Natural Step, 1996) - Beatley(2000)에서 재인용

9) ‘대세의 전환’은 영국 레스터시의 환경단체인 엔비론(Environ)이 주도하였는데, 에너지, 재활용, 교

2. 일상의 편리부터 강조

비싸고 혼잡한 도시의 모둠살이, 약간의 편리함이라도 쉽게 보장된다면 이는 채택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주말농장 또는 도시텃밭이 확대되는 것은 도시 환경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보다는 스스로의 먹거리 건강, 이상의 편리함 등이 더 큰 요인일 듯싶다. 예로 서울 상암동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서도 도시텃밭이 만들어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이유를 생각해 볼 일이다(한겨레 2013. 5. 21). Beatley(2000) 제5장의 카세어링은 초기단계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확산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2011년 말 이후 KT와 수원시가 준비해 온 한국형 카세어링 서비스가 그 선도사례이다. 제6장 암스테르담의 ‘흰색자전거’(white bike) 역시 마찬가지이다. 창원, 대전 등 전국에서 또 대학캠퍼스에서도 시민과 대학생이 쉽사리 이용할 수 있는 공용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관리 및 비용 등의 숙제가 남아 있긴 하다. 좋으면, 되는 것이 분명하다. 도시정부가 약간의 도움을 준다면 더 빨리 더 쉽게 추진될 수 있다.

3. 한국의 전통과 문화, 지역의 맥락에 접목

유럽의 맥락에 더 어울려 보이는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우리의 토양에 접붙이는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예로, 전통 한옥의 멋과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냉난방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어 이른바 ‘제로 에너지’ 한옥의 설계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매일신문 2012.7.12). Beatley(2000) 제10장 에콜로니아의 생태건물 사례, 헬싱키나 코펜하겐의 생태건축단지를 직접 모방하기 어렵다면 우리의 여건에서 딱히 들 수 있는 규모와 내용으로 바꾸면 된다.

제11장에서 보듯이 독일,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지역단위로 후진국 도시와 생태자매결연(ecological twinning)을 맺어 그린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우선 국내 지역 간 협력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도농 농산물직거래 활동은 이미 활발한데, 이를 넘어 그린과 생태의 관점에서 공단, 농촌, 도시 각각의 역량과 경험을 현장에서 공유하면 좋겠다.

딱히 어울리는 맥락은 아니겠지만, 골목길 등 근대문화의 보존, 담장 없애기를 통한 도시녹화는 대구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좋은 사례가 계속 쌓이고 있다. 전통 자산, 지역의 문화를 새로운 ‘그린’ 수요로 바꾸는 지역발 이니셔티브가 이어져야 한다.

4. 경제적 신호와 인센티브를 활용

‘그린’의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 경제와 동떨어지면 그 자체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사실 보통의 자본주의를 환경 또는 자연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닌데, 예컨대 Hawken et al.(1999)의 자연자본주의(natural capitalism)

통 등 분야별로 일련의 구체적 캠페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민 개인의 행동을 교육하고 고무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개념이 그 예라 하겠다.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명 중 하나로 <타임>이 선정한 에머리 로빈스가 폴 호큰 등과 함께 쓴 명저 「자연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모델이라고까지 칭송받았는데, 자동차, 쓰레기, 공산품 제조, 식량, 물 등 인간의 경제활동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이 개념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은 자원생산성(resource productivity), 생물모방생산(biomimetic production), 해법의 경제(solution economy), 자연에 재투자(reinvestment in nature)로서 그간 학술적·실천적으로 다양하게 적용, 실험되어 왔다.¹⁰⁾

위와 같은 큰 담론 말고 지역단위에서 뭔가 구체적인 사례로, Beatley(2000) 제12장 칼룬트보르그의 애즈니스 발전소가 정유공장, 석고보드업체, 황산업체, 지역난방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간 공생을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거창한 명제 이전에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벨기에의 청소제품업체인 에코버 회사 사례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의 기업, 공단, 조력자인 정부부문이 함께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제13장에 요약되듯이 하이델베르크와 뮌스터의 학교에너지 절감프로그램은 에너지와 쓰레기 절감액의 5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

경제적 효율성을 녹색과 완벽히 조화시키는 사례 중 하나가 수직농장(vertical farm)이다. 싱가포르의 세계 최초 상용 수직농장 스카이 그린스(Sky Greens), 스웨덴 린코핑의 원뿔형 농장 플랜타곤(Plantagon), 미국 시카고의 더 플랜트(The Plant) 등은 모두 빌딩형 식물 공장이다. 세계의 비즈니스와 농부들,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셈이다(Newsweek 2013. 5. 7).

5. 그린 거버넌스(green governance)의 중요성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측면으로 지역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는데, 여전히 성숙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느낌이다. 이른바 ‘생태 거버넌스’에 제시된 목표와 수단 각각은 우리네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활력을 제대로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된다. 유럽에서도 EU 차원의 거대 프로젝트가 있고 개별 국가 단위의 사업도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각각의 도시별 활동이다. 종적·횡적 네트워크가 함께 힘을 발휘함으로써 NGO 활동, 시민의 자원봉사가 실질화 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저서로 스웨덴의 환경책임 모형을 잘 논의하고 있는 최희경(2013)에서는 관련 스웨덴 거버넌스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 즉 국제사회의 그린 기준을 잘 지키며 선도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을 중앙정부가 잘 연결시킨다. 이런 중앙의 역할

10) 자원생산성은 물, 광물자원 등을 절약하면서 각 생산단계마다 가급적 적은 원료로 많은 산물을 짜내는 것을 말한다. 생물모방생산은 자원의 채취 및 제조과정에서 닫힌 순환을 강조하여 쓰레기도 가치있게 만들려는 것이다. 해법의 경제에서는 어떤 서비스 공급 때 물질을 덜 쓸수록 공급자나 고객이 함께 이익을 얻는 구조로서 내구성, 재사용 가치 등을 높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연에 재투자한다는 뜻은 자연의 생산성을 복원하고 자연 생태계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모든 생명의 삶을 (때로는 공짜로) 향상시키게 된다는 의미이다(Hawken et al., 1999 - 김명남 옮김, 2011. <자연자본주의>에서 요약 인용함).

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역할도 강조하여 가히 공동으로 환경책임을 나누고 있는데, 환경 분야만의 개별 정책이 아니라 가히 다른 모든 분야와 통합되어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과정의 공개와 투명성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층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생산자 확대책임(EPR)을 통해 법적인 환경책임을 사회적 책임(CSR)으로서 자율적 환경책무를 자연스레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도시의 경우 여러 가지 지표와 검증을 통하여 환경 및 도시관련 추세를 추적하고 공개한다. EU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성 지표를 마련하였고 특히 암스테르담, 덴 하흐, 프라이부르크, 레스터 등 선도적인 12개 도시들은 26개 지표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한다.¹¹⁾ 아울러 지속가능성 매트릭스, 환경예산 개념 등을 통하여 나라 전체든 개별 도시든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작동하고 감시체계로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eatley, 2000).

우리의 녹색성장이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칫 이름뿐 아니라 내용마저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데, 이는 그간 지나치게 정부 주도, 서울 주도로 하향식 계획·집행만이 존재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지역사회, 풀뿌리의 논리와 잠재력에 더 주목하는 유럽의 그린 거버넌스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가 되었다.

6. 여전히 새로운 도전

우리들에게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에서 개발하고 해비타트(HABITAT),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등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에코예산’(eco-budgeting)이 있다(UN-HABITAT, 2009).¹²⁾ 각종 환경 관련, 예컨대 수질개선, 폐수처리 등 사업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예산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지역의 환경 또는 공간 자체를 어떤 크기가 정해진 덩어리 또는 돈주머니로 여기는 가운데, 포장도로나 복개면이 늘어나면 환경지출로 계산하고, 침투성 보도가 만들어지거나 도시공원의 나무를 더 심으면 환경수입 확대로 본다. ICLEI의 지원과 협력으로 세계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이를 실천한 바도 있는데, 이탈리아(Bologna), 스웨덴(Växjö), 인디아(Guntur), 필리핀(Bohol) 도시들이 그 예이다.

유럽의 그린 어바니즘, 특히 스웨덴에서는 지역 환경예산(local environmental budget)의 이름으로 이미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부 지역에서도 충분히 실험할 만한 아이디어일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도시 단위의 ‘건강예산’ 또한 전혀 새롭게 개념화, 실험할 수 있을지 모른다.

11) 네덜란드 덴 하흐(Den Haag, 헤이그)시는 1990년 이래 해마다 ‘환경온도계’(Environmental Thermometer)를 발표하는데, 이를테면 도시에서 손실된 자연지역을 보충하는 상황을 알리고 관련 지표를 추적하는 것이다(Beatley, 2000).

12) ICLEI의 에코예산 홈페이지(www.ecobudget.org)에서는 관련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리더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는 에코예산을 일컬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환경관리 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에 대하여 일부 환경측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가 많은데, 수많은 유럽도시 사례에서 보듯이 복개하천 복원과 자연배수는 이미 커다란 흐름이다. 취리히는 약 40km의 하천을 복원했으며, 베를린과 자브뤼켄에서는 도시의 포장노면을 뜯어내면서 빗물관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생태 지향의 정책과 의지가 여전히 도로와 시멘트에 익숙한 우리 도시에도 새로운 흐름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Beatley(2000) 제5장에서 철거와 재사용을 염두에 둔 네덜란드 아머스푸르트의 스쿨하우스가 소개되는데, 이는 장래 학령 어린이 숫자의 감소를 미리 예측하고 건물 각각을 분리시켜 차후 단독주택으로 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복스미어의 경찰서 건물 또한 20년 치안서비스 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철거가 쉽고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경량자재, 일광조명, 자연통풍 등을 강조하였다. 이런 모형이 쉽사리 우리 땅에 이식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실험인 만큼 공공부문이 앞서 볼 만한 시책으로 여긴다.

V. 마무리

지속가능성 또는 그린 어바니즘이라는 개념과 사조가 지구상에 나타난 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해도, 그 가치는 여전히 힘을 더해 가고 있으며 이 땅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 어떤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적용되고 실천되는 반면, 여전히 낯설거나 아예 시작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K-pop, 한류 등 문화적으로도 급상승하는 참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또는 환경 분야의 국제적 의무 측면에서 오랜 세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국력에 비해 얼마간 무임승차 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당연히 지구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실제로 탄소배출 등의 구체적 영역에서 국가단위의 실질적 의무가 커져가고 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 삶의 내면은 어떤지, 실제 도시공간의 기능과 미관이 바람직한지, 미래 세대를 헤아리는 지속가능성은 보장되는지, 두루 의문이 여전하다.

도시를 바꾸고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이 시스템과 정책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확실치 않을 때가 많다. 유럽에서 성공했다 해서 우리나라나 미국 땅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일단은 기본적인 체제나 정책으로 틀을 잡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유럽 그린 어바니즘과 관련된 저서를 해설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일부 비추었다. 아울러 그린 어바니즘의 관점에서 우리 현실에 주는 통찰과 함께 직간접으로 적용할 사례를 요약하였다. 앞서 언급대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색깔이 흐려지고 있다. 설령 비판의 여지가 있더라도 통째로 버릴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자연스런 흐름을 따라서 오히려 ‘정책의 격상’이 필요하다. 즉 녹색을 지울 일이 아니라 초점을 제대로 맞추어 더 진하게 해야 함을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의 기치 아래 창의적 개인, 신규 수요 찾기, 융합 등 새로

운 서비스 공급방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딱 맞는 것 중 하나가, 이를테면 정책의 격상 즉 ‘녹색성장 3.0’일지 모른다. 중앙정부 중심, 대형사업 일색의 녹색성장을 넘어, 개별 시민과 지역현장에 뿌리내린 가운데 드넓은 녹색 수요를 끊임없이 찾아 한국판·지역 중심 그린 어바니즘을 ‘창조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김홍순. (2006). 뉴어바니즘, 근대적 접근인가 탈근대적 접근인가. 도시행정학보 9(2)47~72.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 녹색성장위원회. (2012).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 2012. 8. 31.
- 윤혜정. (2002). 미국의 스마트성장과 도시개발정책의 시사점. 국토계획 37(7): 7-16.
- 최희경. (2013). 스웨덴의 환경책임 실천모형: 지역 거버넌스 사례. 집문당.
- 하성규·김재익·전명진·문태훈. (2003). 지속가능한 도시론. 보성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 연구.
- Beatley, Timothy. (1994). Ethical Land Use.Principles of Policy and Planning.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eatley, Timothy. (2000). Green Urbanism: Learning from European Cities. Washington D.C.: Island Press.
- Beatley, Timothy & Newman, Peter. (2008). Green Urbanism down under: Learning from Sustainable Communities in Austrailia. Washington D.C.: Island Press.
- Beatley, Timothy. (2009). Biophilic Urbanism: Inviting Nature Back to Our Communities and Into Our Lives. William & Mary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Review 34(1): 209-238.
- Beatley, Timothy. (2010). Biophilic Cities: Integrating Nature into Urban Design and Planning. Island Press.
- Friedman, Thomas L. (2008). Hot, Flat, and Crowded: Why We Need a Green Revolution--and How It Can Renew America. Farrar, Straus and Giroux.
- Hawken, Paul, Amory Lovins, & L. Hunter Lovins. (1999). Natural Capitalism. - 김명남 옮김. (2011). 자연자본주의. 서울: 공존.
- Jacobs, Jane.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 Jacobs, Jane. (2000). The Nature of Economies. Random House. - 송인성·송호준 옮김. (2008). 자연과 경제의 대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 Lehmann, Steffen. (2011). The Principles of Green Urbanism: Transforming the City for Sustainability. The University of Newcasetle.
- MIND. (2007). ECOTHERAPY: THE GREEN AGENDA FOR MENTAL HEALTH. www.mind.org.uk/assets/0000/2138/ecotherapy-report.pdf - [Beatley(2009)에서 재인용함]
- Natural Step, The. (1996). The Four System Conditions from the Natural Step. The Natural Step News 1: Winter. - [Beatley(2000)에서 재인용]
- OECD. (2011). Towards green growth: A summary for policy makers. May 2011.
- Ripkin, Jeremy. (2004). European Dream. Blackwell - 이원기 역(2005). 유로피언 드림. 민음사.
- UN-HABITAT. (2009). ecoBudget, Introduction for Mayors and Municipal Councillors.
- Vries, de Sjerp, Robert A. Verheij, Peter P. Groenewegen & Peter Spreeuwenberg. (2003). Natural Environments-Healthy Environments?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space and Health, 35 ENV'T. & PLANNING A 1717, 1726-27. - [Beatley(2009)에서 재인용]
- Wilson, Edward O. (1993). Biophilia and the Conservation Ethic, in Stephen R. Kellert & Edward O. Wilson eds., THE BIOPHILIA HYPOTHESIS 31, 31-41. - [Beatley(2009)에서 재인용]

[언론기사, 보도자료, 홈페이지]

- 녹색성장위원회. 2013. 2. 4 보도자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 매일신문 2012. 7. 12. 냉난방 비용 제로.. '그린 한옥' 나왔다.
- 연합뉴스 2013. 3. 25. "녹색성장 미흡했다" 국책연구기관 지적.
- 한겨레 2013. 5. 21. "방치된 주차장 더 경작..." "아파트 옆 텃밭 공동체 됐어요"
- 주간조선 2013. 4. 21. 박근혜 정부, 녹색성장+창조경제 접목 시도?
- 충청 투데이 2013. 4. 16. 저탄소 녹색성장.. 말뿐 아니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3. 26 보도자료. "녹색성장 미흡했다, 국책연구기관 지적" 외 2건에 대한 해명자료.
- Economist, The. 2000. 1. 27. Green Growth.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3. 5. 16. E.U. considers emission fines on Chinese and Indian airlines.
- Newsweek 2013. 5. 7. Vertical Indoor Farms are growing in the U.S.
- ICLEI의 에코예산 홈페이지. www.ecobudget.org (2013. 5. 11. 검색)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www.greengrowth.go.kr (2013. 4. 10. 검색)
- 바이오필릭 시티 홈페이지. www.biophiliccities.org (2013. 4. 5. 검색)
- University of Virginia 홈페이지. www.virginia.edu (2013. 5. 18 검색)